

 국토교통부	<h1>보도자료</h1>		
	배포일시	2020. 4. 28(화) 총 9매(본문5)	
담당 부서	기술정책과	담당자	•과장 장순재, 사무관 성언수, 주무관 김연규 •☎ (044) 201-3549, 4997, 4994
	시설안전과	담당자	•과장 김태곤, 사무관 이용재, 주무관 전미자 •☎ (044) 201-4598, 4594, 3588
보도일시		2020년 4월 29일(수)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통신·방송·인터넷은 4.29(수) 11:30 이후 보도 가능	

선제적이고 스마트한 기반시설 관리를 위한 큰 걸음 내딛다

- 4.29일 총리가 위원장인 제1차 기반시설관리위원회 개최
- 위원회는 8개 정부부처 장관과 20명의 민간위원으로 위촉·구성
- 첫 회의에서 ①기반시설 안전강화 종합대책 이행현황, ②제1차 기반시설 관리 기본계획, ③최소유지관리 및 성능개선 공통기준 등 논의

□ 관계부처는 4.29(수)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1차 기반시설 관리위원회(이하 위원회)에서 기반시설 관리에 관한 현황과 아래의 주요 사항을 심의·의결했다고 밝혔다.

<제1차 위원회 주요 심의·의결 사항>

- ① '19년 6월에 마련된 '기반시설 안전강화 종합대책'의 이행현황을 점검하고, 보완사항 중심으로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
- ② 기반시설관리를 위한 안정적인 제도정착과 선제적이고 스마트한 유지관리를 위한 제1차 기반시설관리 기본계획('20~'25) 심의
- ③ 15종 기반시설*의 유지관리 수준을 상향하고, 성능개선 사업의 적정성 판단을 위한 최소유지관리·성능개선 공통기준 의결

* (대상 기반시설) 도로, 철도, 항만, 공항, 하천시설, 댐, 저수지 등 SOC 7종 수도, 하수도, 전기, 가스, 난방, 통신, 송유, 공동구 등 지하시설물 8종

□ 이번 위원회에 보고·의결된 안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.

1 기반시설 안전강화 종합대책('19.6) 이행현황 보고

□ 먼저, 백석역 열수송관 등 잇따른 노후 기반시설 관련 사고에 따라 작년에 범부처적으로 마련된 '기반시설 안전강화 종합대책'의 이행 현황을 보고하였다.

□ 열수송관 등 지하시설물에 대한 긴급 점검을 통해 파악된 안전 사각지대에 추경예산 4,439억원을 투입하여 긴급조치를 완료하고, '20년 기반시설 안전강화 예산'*도 19년 대비 약 40% 증가된 5.5조원을 편성하였다.

* 노후 철도 개량 1.6조원(0.5조원 ↑), 노후 도로 개량 1.5조원(0.1조원 ↑) 등

○ 또한, 열수송관의 민간 중소기업자에게 용자지원 예산을 신설하고, 공공기관의 안전투자로 인한 부채는 경영평가에서 제외하는 등 민간의 안전투자를 유도하고 촉진하도록 하였다.

* 장기사용 열수송관 개치비용 '19년 추경 및 '20년 예산 각각 100억원씩 편성

□ 15종의 기반시설을 관리대상으로 지정하는 기반시설관리법 시행령·시행규칙을 제정('19.12)하고, 민간을 관리주체로 포함하는 기반시설관리법 개정도 완료('20.4)하였다.

○ 이와 같이 기반시설 안전강화를 위해 안전 사각지대 조기 발굴·해소 및 안전예산 확대와 더불어 기반시설관리법의 본격 시행에 앞서 법·제도적인 사전 준비도 정상적으로 추진되었다.

□ 기반시설관리 인력 확충 등 일부 미흡·보완이 필요한 사업과 '20년 이후의 사업계획들은 이번에 마련된 '제1차 기반시설관리 기본계획'에 포함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하였다.

2 제1차 기반시설관리 기본계획 의결

- 기반시설의 지속가능성 확보와 스마트 유지관리 기반 구축은 ‘제1차 기반시설관리 기본계획’(‘20~’25년)을 통하여 4대 전략별로 추진해나갈 예정이다.
- 이번 기본계획에서는 ①새로운 기반시설 관리 거버넌스 정립, ②기반시설 안전등급을 “보통”이상으로 관리, ③스마트 유지관리 신기술 개발을 통한 일자리 확대, ④선제적 투자 강화를 통한 미래 부담의 경감을 추진 목표로 한다.
- 먼저 첫 번째 전략은 종합적·선제적 유지관리 계획 및 이행체계를 구축하여 선제적 관리체계를 마련, 두 번째 전략은 생활안전 사각 지대를 해소하고, 지하공간 통합관리시스템을 고도화하여 생활안전 관리수준을 상향할 계획이다.
 - 세 번째 전략은 스마트 유지관리 신기술 개발과 함께 관련 일자리 개선 및 산업 성장을 지원하는 등 스마트 유지관리를 통한 산업 육성을 추진한다.
 - 마지막 네 번째 전략으로 안전강화 투자를 확대하고 다양한 재원 조달 방안을 마련하는 등 선제적 투자 및 안정적인 투자재원 다각화를 추진할 계획이다.

【 기반시설 관리의 개선 방향 】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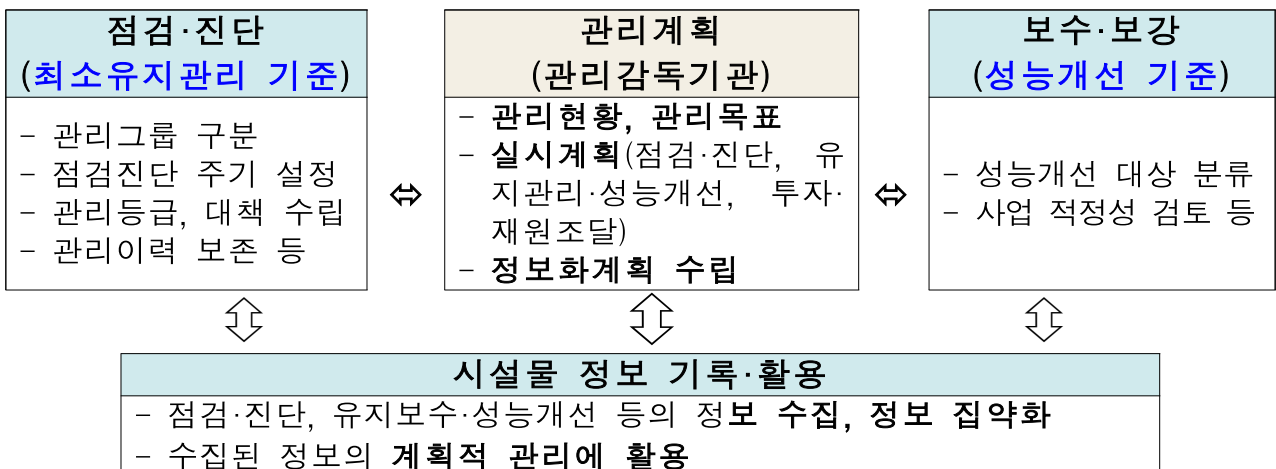
	【 현 재 】	⇒	【 개 선 】
안전점검	보이는 위험만 처리		잠재된 위험도 발굴·해소
투 자	신규건설 위주 투자		노후 시설 선제적 투자 강화
관리체계	시설별 사후 위주 관리		총체적·선제적 관리
관리방식	경험의존 예측·수동 관리		빅데이터 기반 예측·자동 관리
정 보 화	기관별 분절적 관리		플랫폼을 통한 정보 통합관리
기술·산업	인력 중심의 산업		기술 중심의 고부가가치 산업

3

최소유지관리 · 성능개선 공통기준 의결

- 마지막으로 기관별·시설별 유지관리 기본 원칙과 지표인 최소유지관리 공통기준과 성능개선사업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성능개선 공통기준이 심의·의결되었다.
- 최소유지관리 공통기준은 먼저 시설별 관리그룹을 설정하여 관리주체가 소관 시설에 대하여 점검 방법, 주기, 실시자 자격 등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.
 - 또한, 관리주체는 지정된 관리그룹에 따라 시설물을 점검·진단하고, 시설물의 상태등급을 지정해야 하며, 각 기반시설의 관리 정보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보관하도록 하고 있다.
- 성능개선 공통기준은 성능개선 사업의 유형에 따라 사업 대상시설을 선정하고, 기술성·경제성·정책성을 고려한 사업 적정성을 정량적으로 판단하여 우선순위를 고려한 사업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.
- 이번에 의결된 공통기준은 향후 관리감독기관이 수립하는 시설별 기준과 관리계획에서 점검·진단-보수·보강-정보기록으로 순환되는 유지관리 기본 사이클 확립을 위한 근거로 활용될 예정이다.

【 유지관리 기본 사이클 확립 】



□ 이번에 심의·의결된 기반시설관리 기본계획과 공통기준은 관리감독 기관이 수립해야하는 관리계획과 기준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가이드 라인의 성격으로서 개별 기반시설의 구체적 사항과 추진계획은 향후 소관부처와 광역지자체*가 수립할 관리계획과 관리기준에서 구체화 될 예정이다.

* 소관부처: 국토부(도로·철도·하천·공항·공동구), 산업부(가스·송유관·열수송관·전력구·발전댐), 환경부(상수도·하수도·댐), 해수부(항만·어항), 농식품부(저수지), 과기정통부(통신구) 등 6개 부처
광역지자체: 서울, 부산, 경기, 강원, 경남, 제주 등 17개 시·도

□ 오늘 위원회에는 교통, 방재, 환경, 에너지·통신, 제도·정책, 재정·회계, 정보·시스템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각 부처 장관들이 참석해 다양한 시각에서 자유로운 토론이 이뤄졌으며, 위원회에서 나온 내용들을 보완하여 기본계획의 경우에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.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기술정책과 성언수 사무관(☎ 044-201-4997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□ 운영근거

- 기반시설관리법 제18조에 따라 정부위원과 민간위원*으로 구성, 기반시설 관리 추진방향 등 주요 사안에 대해 심의·의결

* 위원장(국무총리)을 포함하여 30인 이내(정부 9명, 민간 20명)

□ 운영체계

- (위원 임기) 1기 위원회는 '22.4월까지 2년간 활동
- (개최 주기) 분기별 1회 정례 개최하되, 현안 발생시 수시개최
- (분과위 운영) 심도 깊은 논의를 위해 4개 분야별로 분과위* 설치

* (4개분야 분과위원회) 총괄·교통시설·지하공급시설·방재시설 분과위원회

□ 주요 심의사항

- 기반시설 관리 정책 및 제도의 기본방향
- 기반시설관리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
- 최소유지관리·성능개선 공통기준
- 유지관리 우수 기반시설의 선정
- 국제협력, 기술개발, 인력양성 및 기반구축 등에 관한 사항
- 중앙행정기관과 광역지자체와의 정책 조정

□ 1기 위원회('20~'22년) 주요 추진과제

① 기반시설관리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확정

- (기본계획) 기반시설의 체계적인 유지관리 및 성능개선을 위하여 국토부장관이 5년 단위로 수립·시행하는 법정계획*

* 관계기관 협의('19.11~12)→ 공청회('19.12)→ 위원회 심의→ 국무회의 심의

- 15종 기반시설*의 유지관리 수준·방향, 자원조달 계획 등을 포함

* (교통시설) 도로·철도·항만·공항, (방재시설) 하천·저수지·댐, (유통·공급시설) 상수관·전력선·가스관·열수송관·통신구·공동구·송유관, (환경기초시설) 하수관

- (관리계획) 관리감독기관*이 소관 기반시설의 체계적인 유지관리 및 성능개선에 관한 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·시행

* 중앙부처 7개(과기정통·행안·농식품·산업·환경·국토·해수부), 광역지자체 17개

② 최소유지관리 및 성능개선 공통기준 설정

- 관리감독기관이 소관 기반시설의 최소유지관리기준 및 성능개선 기준을 설정하는데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사항을 규정

* (최소유지관리기준) 관리그룹·수준·등급 등의 지표를 설정하고, 이를 통해 안전점검 실시, 관리대책 수립, 이력 보존 등의 조치 시행

(성능개선기준) 유지관리보다 성능개선이 유리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

③ 기반시설관리 종합투자계획 수립

- 기본계획 및 시설별 관리계획에 따라 투자방향 및 자원조달 방안 등을 판단하여 종합투자계획 수립

④ 기반시설관리 기술·산업 육성

- 5G, IoT 등의 첨단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유지관리 기술 개발·보급 방안을 논의하고, 관련 산업 일자리 개선 및 성장 지원

(위원은 가나다 순)

성 명	주 요 경 력
강범구	▪ 한국수상교통시설협회 회장
국경복	▪ 전북대 경제학부 석좌교수
김용성	▪ 강원대 지역건설공학 교수
김창섭	▪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
나희승	▪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원장
민경석	▪ 한국물기술인증원 원장
박은미	▪ 목원대 도시공학부 교수
성효용	▪ 성신여대 경제학 교수
양형정	▪ 전남대 SW공학 교수
엄영숙	▪ 전북대 경제학 교수
오승은	▪ 제주대 행정학과 교수
이현종	▪ 한국도로학회 회장
임은선	▪ 국토연구원 공간정보연구본부장
조경숙	▪ 이화여대 미래사회공학 교수
조계춘	▪ KAIST 건설환경공학 교수
조윤호	▪ 중앙대 건설시스템공학 교수
지 운	▪ UST 건설환경공학 부교수
최규하	▪ 한국전기연구원 원장
최병호	▪ 부산대 경제학부 교수
한승현	▪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원장

세계 일류의 기반시설 관리로 강한 경제, 고품격 생활안전 실현

제1차 기반시설 관리기본계획('20~'25)

기반시설 지속가능성
확보를 위해 스마트 유지관리 기반을
구축하겠습니다.



4대 전략 10대 핵심 과제

전략 1

선제적 관리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

- 종합적·선제적 유지관리 계획 체계 정립
- 유기적 유지관리 이행체계 구축
- 관리강화 체계 확대방안 마련



전략 2

생활안전 관리수준을 상향시키겠습니다

- 기반시설 안전·유지관리 합리화
- 생활안전 사각지대 해소
- 지하공간 통합관리시스템 고도화



전략 3

스마트 유지관리를 통한 산업육성을 추진하겠습니다

- 데이터 기반 과학적 관리체계 구축
- 스마트 유지관리 신기술 개발 및 활용
- 유지관리 일자리 개선 및 산업성장 지원



전략 4

선제적 투자 및 투자재원을 다각화하겠습니다

-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선제적 투자 강화
- 다양한 안전투자 자원조달 방안 마련

